

비전 2030과 사회복지서비스

Vision 2030 and Social Welfare Services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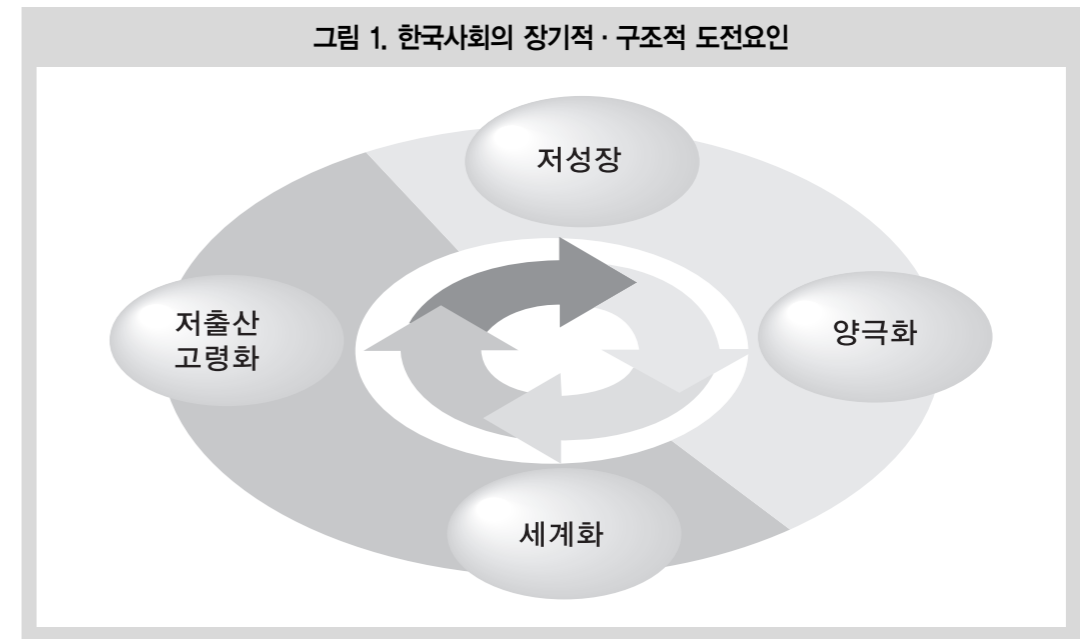
- 비전 2030의 기본방향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나타남.
 - 특히, 보육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한국사회의 구조적·장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성찰(省察)과 전략적 사고(思考)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비전달성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보완이 필요한 향후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기본원칙 등의 제시
 - 가족복지서비스, 이주거정 복지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괄적 복지서비스
 -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참여, 아동문화 등 '아동중심적',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육아(育兒)를 직접적 서비스 자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 해외인구의 유입 등 특단의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유지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현실화, 장학제도 등 다각적 추진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 노인소득 및 노인요양 외에도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노년문화, 노인의 성(性), 재가노인 복지인프라, 노인학대, 장묘, 실버산업 등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

1. 서론

한국사회는 장기적·구조적으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등의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경

제적 문제의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전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은 일자리, 생계, 노후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저출산→저소비→저성장'으로 진

그림 1. 한국사회의 장기적·구조적 도전요인



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¹⁾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재정은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²⁾ 국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빈곤의 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이 도래하여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하며, 그리고 복지지출의 획기적 증대가 어려워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인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비전 2030에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진단과 정책방향,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비전 203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1)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음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즉, 1983년 인구대체수준(TFR 2.1명) 이하에 도달하지 불과 22년이 경과된 2005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1.08명)에 머무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의 등락(騰落)은 있겠지만 조만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더군다나 핵심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연령층은 2007년에 절정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어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와 생산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2)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5년 8.6%(중앙 및 지방의 복지재정과 사회보험)로 스웨덴 28.9%, 독일 27.4%, 일본 16.9%, OECD 평균 21.2%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2. 비전 2030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주요 진단과 정책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주요 진단

비전 2030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문제점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95~2005년 동안 복지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9.7%보다 현저히 높아 13.2%나 되었고, 복지재정규모는 1995년 13조원에서 2000년 28조원, 2005년 45.2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미흡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래에 다가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의 대응책이 미흡하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여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36.3%에 이르고 있고, 관련 업무가 4개 부처에 분산됨으로써 비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양극화 및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으로 중산층 가정의 보육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육료 가격규제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³⁾

다섯째,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12.1%(경증포함)인데 반해, 공적 서비스 수발수혜자는 1.4%에 불과하다(2005년). 그렇지만 향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수발필요 노인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여섯째,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체인구의 약 4.4%인 약 215만명)의 전반적 복지수준은 극히 미흡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비장애인 빈곤가구는 6.8%이나 장애인 빈곤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194만)의 13% 수준으로 높다.

일곱째,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⁴⁾ 임대주택 재정투자가 1995년 1.25조원에서 2000년 3.59조원, 2005년 3.84조원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한국 2.7%(2005, 재고물량기준)에 머물고 있으며,⁵⁾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에 달하고 있다.

여덟째, 국민생활에서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국민불안 및 정부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즉, 급식

사고,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그린 성분이 검출된 장어 등으로 식품불안전이 사회문제화 되었다.⁶⁾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정책방향

비전 2030의 기본방향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⁷⁾ 특히, 보육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한다. 즉, 보육제도 정비, 근로여건 개선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제고 및 취업 및 전업을 촉진한다. 둘째, 보육, 노인수발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활동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⁸⁾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육부담 완화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넷째, 교육양극화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사고육을 제도권 학교로 흡수한다. 아울러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후 교육 기회를 적극 확대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현행 2%) 상향 조정, 장애수당 인상, 의료, 특수교육, 이동권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여섯째, 저소득 임차거주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일곱째,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고객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식품, 공중위생, 교통 등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전 2030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패러다임과 미래상

1)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최근까지 한국의 발전전략은 ‘선(先)성장 후(後)복지’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3) 2006년 기준,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이며,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였음(2005년 조사결과).

4) RIR(임대료÷월소득)은 한국 24%(2005), 미국 22%(2003), 캐나다 21%(2001), 일본 11%(2004)임.

5) 2000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일본 7%, 영국 22%, 독일 20%로 높음.

6) 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청, 농림부(축산물 등), 교육부(학교급식), 환경부(먹는 샘물), 산자부(천일염) 등 8개 부처와 지자체로 다원화되어 있는 점도 식품 불안전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7) 이 외에도 기본방향에는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R&D, 고등교육에 투자, 제도혁신, 시장과의 역할분담 강화 등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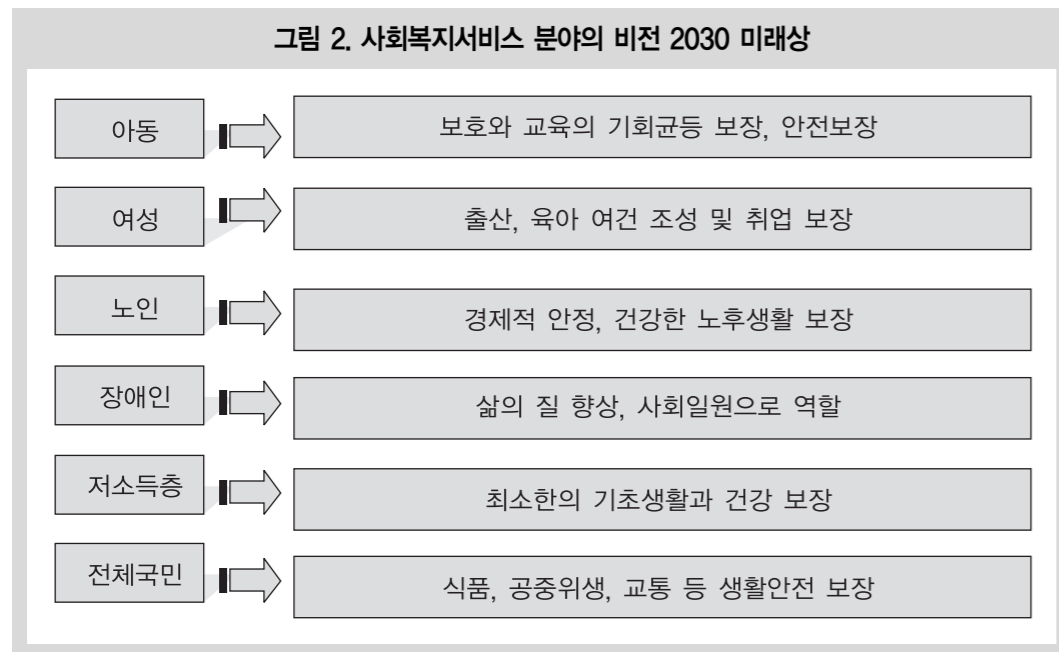
8) 개인, 지자체, 국가 공동책임(사회연대원리)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2008년 7월 시행)하여 노후생활안정과 가족부양부담을 완화함.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성장을 설정하고, 복지는 가족공동체에 의존하고 사회안전망은 외환위기 대응차원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경제성장은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s)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결과적으로 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동반 성장토록 하는 패러다임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도모토록 하였다. 즉,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제로 판단하여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통합·추진하는 전략을 강구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비전 2030 미래상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여성에게는 출산·육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노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이고,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되며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이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전체 국민이 식품, 공중위생, 교통 등의 생활안전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실행계획

사회복지선진화 전략에는 일반, 공공부조, 근로복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5개의 항목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근로복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있는 것에는 치안분야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건설’이 포함된다.

1) 근로복지 실현

정책목표인 근로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 수당 등, 직장보육시설 확대, 그리고 직장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 네 가지이다. 이들 실천과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남녀소득격차를 제시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1%에서

2010년 55%, 2020년 60%, 2030년 65%로 증대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남녀소득격차(여성소득÷남성소득)’는 2003년 0.48에서 2010년 0.53, 2020년 0.60, 2030년 0.70으로 점차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2003년 기준의 남녀소득격차는 네덜란드 0.53, 미국과 영국 0.62, 스웨덴 0.69임을 감안할 때, 2010년에 네덜란드 수준으로, 2020년에 미국, 영국 수준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스웨덴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2) 노인요양보장 강화

정책목표인 노인요양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대상 확대, 노인요양보장 강화,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세 가지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대상 확대’는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수혜 노인수÷치매·중풍 노인수)을 2005년 11%에서 2010년 35%, 2020년 70%, 2030년 100%로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⁹⁾ 2030년까지의 계획은 노인수발보

표 1. 근로복지실현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 • 직장보육시설 확대 • 직장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8.4	48.8	50.1	55	60	65
	• 남녀소득격차	-	0.45	0.48('03)	0.53	0.60	0.70

9)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2008년 6월까지 계속될 것이며, 2006년 2월 16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협법 정부 제출안을 반영한 것으로 2008년 제도 도입(1~2 등급), 2010년 대상 확대(1~3 등급), 그리고 2030년 수발필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보장 강화’는 ‘공적노인요양보호 비율’(수혜 노인수÷전체 노인수)을 2005년의 1.4%에서 2010년 4.1%, 2020년 8.9%, 2030년 12.1%로 연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확충’은 ‘인구 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를 2005년 0.5개에서 2010년 1.5개, 2020년 3개, 2030년 4개소로 증가할 계획이다.

3) 출산·육아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정책목표인 출산·육아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만4세아 완전무상보육·교육 실시, 차등보육료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영아 현물급여제도 도입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자율화 등이다. 둘째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등이다. 셋째는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와 무상예방접종 확대이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육아시설이용 영유아÷전체 영유아)은 2005년 47%에서 2010년 65%로 증가하고(새로마지플랜 2010에 반영), 2017년에는 만4세 완전무상보육·교육을 실시¹⁰⁾하여 2020년 67%로 올리며, 2025년에 유아에게 100% 수혜(← 2005년 70%)토록 하고, 2030년에 영아에게 50% 수혜토록 함으로써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2030년에 7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육아비용 부모부담률’(부모부담비용÷총 육아시설 이용비용)을 2005년 62%에서 2010년 42%로(새로마지플랜 2010에 반영), 2012년부터 영아현물급여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부담률을 38%로 낮추며, 그리고 2030년에는 37%로 감소토록 장기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표 2. 노인요양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대상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0.6	5	11	35	70	100
• 노인요양보장 강화	• 공적노인요양보호비율(%)	0.1	0.6	1.4	4.1	8.9	12.1
• 장기요양시설 확충	• 장기요양 병상수	-	0.2	0.5	1.5	3	4

10) 2012~'17년에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함.

2005년 1.08명인 합계출산율을 2010년 1.3명, 2020년 1.6명, 2030년 1.8명으로 증가시킨다는 장기계획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020년에 가서야 2003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계획이며, 2030년에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인구규모(4.6천만명) 달성에 필요한 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게 될 계획이다. 그리고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을 감소시키는 정책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2002년의 영아사망률 5.3을 2010년 4.5, 2020년 4.0, 2030년 3.0으로 점차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은 현재의 호주 수준에, 2020년은 현재의 프랑스 수준에, 그리고 2030년에는 현재의 일본과 스웨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¹¹⁾

4)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목표인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활동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전면 실시,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시스템 구축(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 등이다. 즉,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5년 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후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그리고 방과후 활동 간의 연계·조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공동체(복지관, 병원, 경찰, 교회 등)와의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제도 도입 등 운영시스템 개선을 병행·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다.

표 3. 출산·육아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만4세아 완전무상보육·교육 실시 •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저소득층-중산층)	• 육아서비스 수혜율	20	31	47	65	67	74
• 영아 현물급여제도 도입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료 자율화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	62	42	38	37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 자녀양육가정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등	• 합계출산율	1.65	1.47	1.08	1.3	1.6	1.8
•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무상예방접종 확대	• 영아사망률	7.7 ('96)	6.2 ('99)	5.3 ('02)	4.5	4.0	3.0

11) 영아사망률은 2003년 기준으로 호주 4.5, 프랑스 3.9, 스웨덴 3.1, 일본 3.0이며, 2002년의 OECD 평균은 6.5이었음.

이와 같은 실천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수혜율’ (방과후 활동참여 아동·청소년 ÷ 전체 아동·청소년)은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상승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2006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 증대계획인 2005년 31%, 2010년 65%, 2020년 70%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5) 장애인 자립·자활

정책목표인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실천과제는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장애인의 무고용제,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장애인 자활근로 사업장 지원 등이고, 둘째는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이며, 셋째는 취업장애인 생활안정, 넷째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이다.

장애인 실고용률(장애인 종사자 ÷ 민간부문

종종사자)을 2004년 1.3%에서 2010년 1.7%, 2020년 2.5%, 2030년 3.0%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2003년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3.6%이고, 1994년 프랑스 장애인 고용률 4.1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계획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²⁾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5년 72.7%에서 2010년 82%, 2020년 95%, 2030년 100%로 향상시킬 계획인데, 이는 편의시설증진법(1998년)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취업장애인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대비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비율’을 2005년 44.5%에서 2010년 50%, 2020년 75%, 2030년 9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을 2005년 36%에서 2010년 50%, 2010년 95%, 2030년 100%로 상승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컴퓨터 산업의 발달과 인터넷 확산 수준을 감안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 판단된다. ‘국공립장애인 재활병원수’를 현재 1개소에서 2010년 7개소, 2020년 16개소, 2030년 32

표 4. 교육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아동 방과후 활동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전면실시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시스템 구축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6 ('96)	40	32	67	72	75

1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이나 프랑스와 폴란드는 6%, 독일 5%(중증장애인), 이탈리아 8%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표 5.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무고용제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장애인 자활근로 사업장 지원 	• 장애인 실고용률	0.4 ('97)	1.0	1.3 ('04)	1.7	2.5	3.0
•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47.4 ('98)	50.0	72.7	82	95	100
• 취업장애인 생활안정	• 상용근로자 대비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비율	42.5 ('98)	43.1	44.5	50	75	90
•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	6.9	36	50	95	100
•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 국공립장애인 재활병원수	1	1	1	7	16	32

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2020년에 각 시·도 1개소, 2030년에 각 시·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6) 주거중심의 복지정책 전환

정책목표인 주거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는 주택종합계획('03~'12),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과제가 추진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상승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 전체가구)은 2005년 5.1%(사업계획 승인물량 기준)에서 2010년 10.1%, 2020년 16%에 이르도록 계획하고 있다. 2011~13년까지 주택바우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0년 23%에서 2010년 18%, 2020년 9%로 낮추고, 2030년에는 완전해소토록 계획하고 있다. 주거의 최소면적기준(m²)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사회에서는 37m², 일본 44m², 프랑스 56m² 등이다.

표 6. 주거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주택종합계획('03~'12)	• 공공임대주택비율	-	2.3	5.1	10.1	16	16
•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3	23 ('00)	18	9	0
• 부동산 가격안정화							

7) 복지서비스 체감도 개선

정책목표인 복지서비스 체감도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설정하여, 고객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전달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006년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에, 2007년 1월부터 모든 시·구에,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모든 군에서 전달체계를 개편토록 하였다. 또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중앙부처 서비스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서비스 혁신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을 증원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를 2005년 3,800명에서 2010년 3,320명, 2020년 2,160명, 2030년 1,000명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제시하였다.

비전 2030의 '사회적 자본확충' 전략에서 실

천과제로 제시된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와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는 업무효율화, 업무수행 체계개편(지방이양, 민간위탁), 시장 메커니즘 적용(아웃소싱, 바우처) 등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재배치하여 사회서비스 등 인력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 복지체제의 보완차원에서 가족·시민·지역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복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¹³⁾

8) 생활안전보장 강화

정책목표인 생활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식품안전, 공중위생, 교통안전 등의 생활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는 'WHO 인증 안전도시'를 2005년 1개에서 2010년 3개, 2020년 7개, 2030년 10개로 증가토록 하는 계획이다.¹⁴⁾ 또한 생산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체계적 식품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생산지·수입업자의 직접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며, 그리고 위해성 평가 강화 및 신속한 식품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 1996~2000년의 평균 아동안전사고율은 일본 5.8명, 독일 5.0명, 영국 3.8명, 미국 10.2명, OECD 평균 7.3명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에 OECD 평균, 2020년 일본수준, 2030년 독일수준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9) 아동안전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정책목표인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중 아동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동안전시설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이다.¹⁵⁾ 이의 실천으로 아동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율을 2005년 8.3%에서 2010년 7.3%, 2020년 6.0%, 2030년 5.0%로 감소시킨

5.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2030 비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평가

한국사회의 구조적·장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성찰(省察)과 전략적 사고(思考)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표 7. 복지서비스 체감도 개선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명)	15,081	10,456	3,800	3,320	2,160	1,000

13) 지역공동체의 모범사례를 발굴,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간의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기능을 강화함.
 14) WHO인증 안전도시는 2004년 현재 전체 78개이며, 스웨덴이 가장 많은 14개, 노르웨이 13개, 호주 9개 등의 순인데, 2030년 10개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5위권에 도달될 전망이다.

표 8. 생활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식품안전, 공중위생,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보장 강화	• WHO 인증 안전도시	-	-	1	3	7	10

표 9. 아동안전을 위한 비전 2030의 실천과제와 지표

실천과제	지표명	지 표					
		'95	'00	'05	'10	'20	'30
• 아동안전시설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 아동안전사고율	-	14.8	8.3	7.3	6.0	5.0

15) 현 정부는 2003년을 아동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2003년 5월 5일),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05).

꿈을 갖게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갈등심화 등 결코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있어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등 결코 밝지 않은 현실에 지속가능 발전의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성장과 분배'의 동반전략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큰 폭으로 확충시킨다는 대전제를 설정하였음은 사회안정, 사회통합,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비전달성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2) 향후 과제

지속적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기본원칙 등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사회투자국가로의 이행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정책의 이슈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의 전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가족복지서비스, 이주가정 복지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간과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족과 사회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화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서비스를 다루고 있지 않음은 문제이다. 또한 세계화 추세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이주가정이 증가할 것이고, 현재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동, 노인, 임신·출산여성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포함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과 함께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노인수발보험, 영유아 건강관리 등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

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는 영유아 보육·교육, 방과후 활동·교육, 아동안전 등에 제한적으로 장기계획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참여, 아동문화 등 '아동중심'의,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참여 확대, 창의적 활동 여건 조성, 역할과 능력배양, 포괄적·통합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관계 증진, 아동보호체계 구축(드롭인 센터, 중장기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 아동의 식사권 보장, 대안학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유아 보육·교육과 방과후 교실·학습 등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고, 출산율 제고와 여성취업 증대를 위한 대책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영유아 보육·교육과 방과후 교실·학습 등이 출산율 저하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맞벌이 여성의 어려움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리보육관점 또는 기본보육관점에서의 접근은 후진성(後進性)을 면치 못하는 것이며, 아동이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서 보육을 인식하는 보편적 보육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육아지원정책이 계획대로 강화된다

하더라도 육아(育兒)를 위한 한국부모의 지출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직접적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비전 2030에 의한 육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2003년 기준의 호주 34%, 덴마크 및 영국 30%, 프랑스 27%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부모의 육아(育兒)를 위한 지출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출산율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섯째, 합계출산율을 장려정책이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인구규모 감소,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해외인구의 유입 등 특단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은 어느 사회정책보다 달성도가 낮기 때문에 지나친 목표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2020년에 가서야 IMF 경제위기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2030년에도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이하에 머물면서 2004년의 프랑스 출산율(1.9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계획된 비전 2030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2030년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인구규모(4.6천만명)가 달성된다는 사실은 2030비전에서 목표로 설정한 출산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수십년 전)의 고출산율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즉, 2030비전에서 제시한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이후 인구규모는 급속히 감소될

것이 자명하므로 출산장려정책 외에도 다른 사회정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양극화 해소가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활동·교육의 강화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현실화, 장학제도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직업-소득'과의 관련성을 감안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교육에 의하여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빈곤아동의 교육 수혜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노인소득 및 노인양양에 국한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노년문화, 노인의 성(性), 재가노인 복지인프라, 노인학대, 장묘, 실버산업 등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의 노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지만 연금수급율의 증대와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 등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넓게 노인복지서비스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노인양양보장 강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지라도 공적노인양양보호비율과 장기요양시설의 확보는 여전히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2000년 기준으로 공적노인양양보호비율이 독일 10.1%, 일본 8.7%, OECD 평균 13.9% 등 임을 감안할 때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일본보다 약 20년, OECD 평균보다 30년 이상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이 계획대로 확충된다 하더라도 '인구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가 2003년 기준으로 일본 5.0개, 영국 3.5개, OECD 평균 4.0개임을 감안할 때, 영국보다 20년 이상, OECD 평균보다 30년, 일본보다 30년 이상 뒤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상용근로자 대비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비율'을 증대하더라도 '취업장애인 생활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애인 취업훈련, 재교육, 창업지원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한 고용률 증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현재 상용근로자 대비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 비율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는 '취업장애인 생활안정'이 달성될 지가 의문시된다.

열한 번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계획대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전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수혜자의 욕구를 감안한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영국 21%, 덴마크 19%임을 감안한다면 비전 2030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미약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수혜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공급의 양적 및 질적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열두 번째, 과거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의 평가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확대하여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겠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던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범사업의 실패요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인력, 재정, 사업연계, 민관협력'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열세 번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더욱 확충하고, 민간복지종사자의 역할 증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 2030의 계획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2030년 1,000명으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2003년 기준으로 호주 800명, 영국 28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2030년에도 클 것이며,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다 확충계획을 강화하고 민간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비전 2030'은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이므로 상황이 변화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분야와 영역이 다양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많은 유형의 중장기 계획과의 방향성 일치여부와 상반되거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5개년계획(참여복지계획), 노인 및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어린이 보호·육성종합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가족정책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의 관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목표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